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다섯 돌을 돌아 본다



| 정현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북핵문제라는 불씨가 새로운 불길이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민족 화해와 협력의 대장전이라던 6.15선언과 북핵사태라는,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부조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혹은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논거는 있습니다. 당시 회담에서 평화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 온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던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5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2000년 6월 15일, 그날 우리가 그렸던 5년 후는 어떠했을까요? 자유롭게 오가는 남북의 민간인들, 남북공동경제구역에 함께 일하는 남북의 근로자들, 군사적 긴장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제1차 북핵 위기가 막바지에 달하던 1994년 6월의 긴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행동을 준비했고, 전쟁일보 직전까지 갔던 일촉즉발의 상황, 카터의 남북과 남북정상회담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엄청난 불행이 왔을 지도 모를 바로 그때의 상황 말입니다. 그러나 비관은 금물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6.15공동선언을 돌아본다.

6.15공동선언은 전문과 5개항의 선언 그리고 문서의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보충되어 사실상은 6개항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의 가장 큰 정치적 의의는 상호간 국가 체제의 인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 도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 통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는데, 이것은 휴전협정 상 여전히 ‘적국’인 남북 관계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명시적 인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체제에 대한 상호 인정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큼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러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국가체제를 수립하면서 ‘적화통일’과 ‘북진통일’의 의지를 키우다가 결국 전쟁을 치렀고,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서로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흡수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남북교류라는 것도 늘 서로의 체제를 공격할 수 있는 요소를 찾기 마련이고, 그 속에서 교류의 지속이나 상호간 신뢰는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은 바로 이러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선언 제2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언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언 2항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통일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항목이 갖는 의의는 오히려 과거와의 단절에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확인하는 것처럼 남북이 지금 시기 통일방안까지를 논의하는 것은 성급한 일입니다. 당시는 오히려 화해의 문제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일방안 문제가 선언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교류에서 약은 수를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제 인정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는 선언 제1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언 제 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의 의미는 물론 민족 자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지난 1972년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과 비교하면 의미는 좀 더 분명해 집니다. 당시 발표된 성명의 제 1항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6.15공동선언의 1항과 맥락이 동일합니다. 자주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7.4공동성명이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이며 6.15공동선언은 “서로 힘을 합쳐” 만드는 자주입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2년 당시까지도 북은 주한미군 문제를 들어 우리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하면서 우리를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왔고, 이러한 북의 인식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 북은 적어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남측의 권한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고, 아울러 주한미군의 주둔이 있더라도 남북이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 남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선언은 그밖에도 3개항이 더 있는데 장기수 송환이나 이산가족 문제, 경제협력,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교류분야, 그리고 당국간 회담이 그것입니다.

선언의 마지막은 역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2차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이행, 깊어가는 신뢰

지난 5년간 남북관계는 무척 발전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최초로 기록되는 역사가 5년의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넘어 도로와 철도가 뚫렸고, 뱃길과 하늘 길도 열렸습니다. 그 길을 따라 이산가족이 오가고 정부관계자와 민간인들도 오갔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사람도 해마다 늘어 2000년에는 7,300여명이던 방문객이 2004년에는 2만 6천명에 이르렀습니다.

개성공단 개발은 더딘 걸음이었지만 시범단지가 조성되고 전력과 통신도 공급되어 남북의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남북 교역도 늘어 1999년에 3억 달러 수준의 교역액은 2003년, 4년 들어서는 7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 당국간 회담도 남북장관급 회담이 14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가 9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비료와 식량 지원도 정례화 되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2000년 12월 남북노동자 공동행사를 계기로 농민,

여성, 교사, 청년학생 등 부문간 교류도 정례화 되었으며 3.1절과 6.15공동선언발표 기념일, 8.15광복절과 개천절 등 주요한 계기마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족 공동의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북의 군사 협력이 점차로 진행되어 왔던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2000년 9월에 최초의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제주도에서 개최되었고 이때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날 남북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것 중에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해 비무장지대를 개방하고 남북관할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있는데, 곧이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2000년 11월과 2002년 9월에 채택된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 인민군간 합의서'가 그것인데, 이 합의서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일부 구간의 개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 남북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 군대들 사이에 협의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서에 기초하여 남북의 군사 당국자는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남북의 군사적 협력은 6.15공동선언 발표 네 돌을 준비하면서 2004년 4월에 금강산과 설악산에서 각각 개최된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또한 계승되었습니다. 남북의 장성들은 서해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간 정보소통 관계를 개설하였으며 비록 100% 이행되지 못했지만 휴전선 일대에 서로를 자극하는 여러 수단들도 제거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협력 과정을 통해 우리는 6.15공동선언이 그 자체로는 평화문제를 담고 있지 못하지만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평화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담고 있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 이행의 장애와 본질

6.15공동선언 이행은 물론, 여러 난관을 겪으면서 늘 시 험대에 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두 가지 정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미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북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인식에 크게 반발하지 않을 때 남북관계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2001년 3월에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 직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연기된 경험이 있으며, 2002년에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후 또한 남북관계가 정체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남북관계 정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2002년 10월에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의 캘리 특사가 북을 다녀 온 후 HEU, 즉 고농축우라늄을 북이 만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면서 북미 사이에 새로운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이후 북이 취한 행동은 대체로 알려져 있는바 그대로, 2003년 1월의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 2003년 4월 폐연료봉 8천개의 재처리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외무성 성명 발표, 2003년 10월 8천여 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플루토늄은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 2005년 2월 마침내는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성명이 그것입니다. 북핵 위기가 심화되는 동안 남과 북,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도 3차에 걸쳐 열렸는데 그 속에서도 북미관계는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북미관계의 경화로 인한 남북관계 위기에 대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주로 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관계를 다시 재개시켰는



데, 이는 남북정상 회담에서 확인된 정상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 위기는 식량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흔들리지 않고 진행하였는데 이 또한 남북관계의 끈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고 보여 집니다.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세 위기의 두 번째는 북이 남측에 대해 체제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2004년 7월에 있었던 탈북자의 대량 입국입니다. 당시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던 탈북자 468명을 비행기를 직접 보내 국내로 이송한 것은 북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북은 우리 정부가 자신의 체제를 균열시키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정제시키는 많은 외적, 내적 요인의 본질은 결국에는 북 체제를 인정하고서,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남북간에 그것은 6.15공동선언에 담겼지만, 북미 간에는 여전히 미정이며 결국은 수교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미국은 북을 인정하기에 주저함을 보이고 있는 데, 민주당 행정부가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1994년부터 치더라도 7년이었습니다. 2000년 10월에 클린턴 대통령과 조명복 조선인민군 차수가 만나 공동문서를 낸 것이 그 결과물입니다. 이 시기 민주당 행정부는 우리의 6.15공동선언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수준에서 체제인정과 수교협의를 공식화했던 것입니다. 공화당 행정부가 5년째 겪고 있는 험한 대북인식은 물론, 민

주당 행정부가 겪는 인식의 과정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라는 새로운 환경에 갇혀 있으며 이것은 미국민의 인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미간에도 다시금 상호인정의 정신이 살아나야 할 때입니다.

변치 않는 진실, 남북은 함께 살아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우리의 남북화해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상호체제의 인정과 평화공존위에서의 통일지향은 1991년 12월 13일에 남북의 총리가 채택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이미 표현되었으며, 이 문서에는 남북 사이에 다룰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은 실천선언이자 책임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5년은 이미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의 원칙을 더 우선으로 내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핵문제는 최대 현안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평화의 최소치입니다.

남북은 함께 살아야 하며, 이것이 또한 남북관계를 다룸에 있어 우리가 견지해야 할 최고의 것입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을 맞는 우리의 선택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에 대한 체제인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이것이 6.15공동선언 발표 다섯 돌을 맞으며 돌아보는 생각의 중심입니다.